

- 정부 첫1년 경제정책 성과 판단하기 이름
- 한미 무역협상 평가

FTA – 성공적

철강관세 면제 – 70% 쿼터 수용

외환시장 개입 – 진행 중, 대량 외자 유입시 매입 제한 우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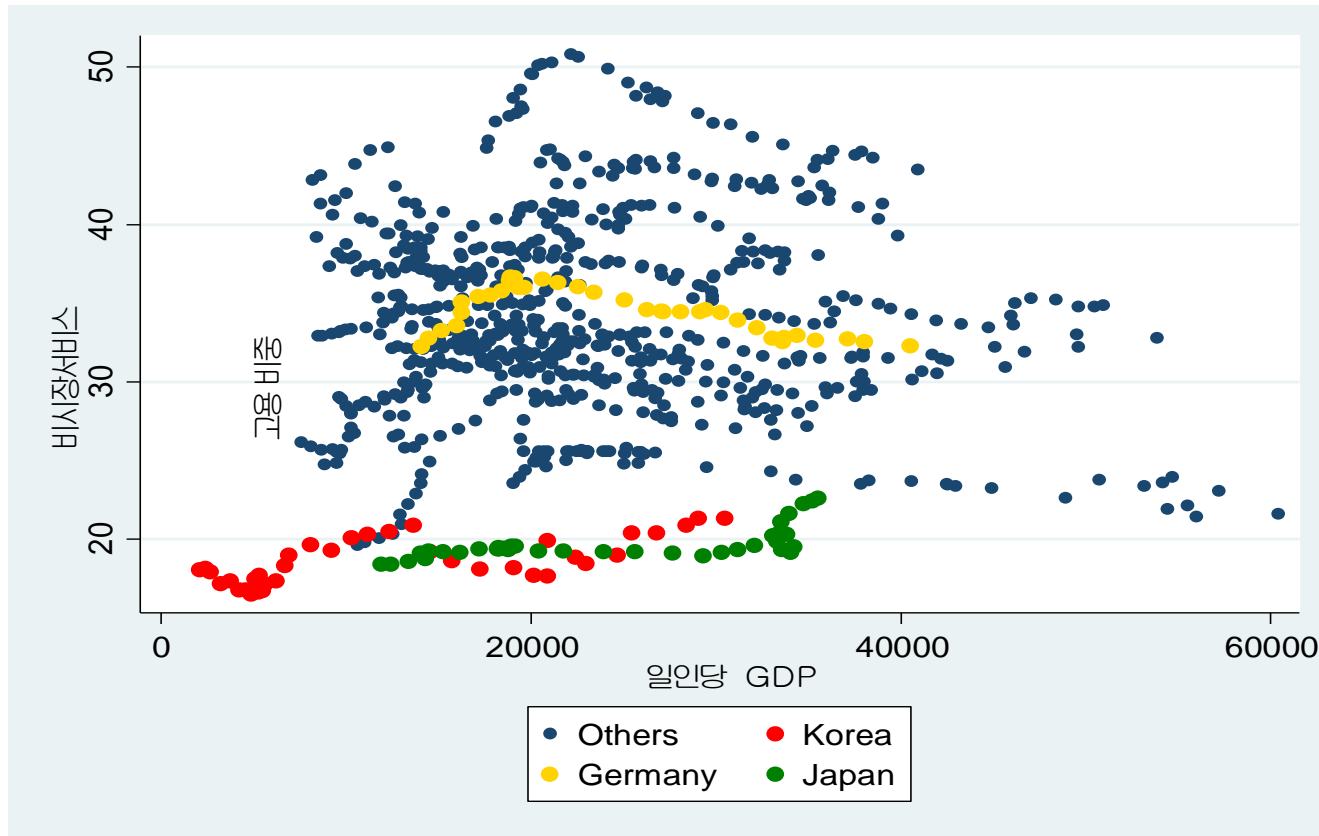
방위비 분담?

- 정부 혁신정책의 큰 그림 아직 못 그려
 - 산업 구조조정과 서비스 규제완화 불가피
 - 자본시장 중심의 금융시장
 - 교육개혁과 벤처부문 인력 유인책

정책평가

- 소득불평등 완화를 통한 소비와 내수 진작 필요성에 공감
 - 노동시장 현실
 - 대기업과 중소기업 양극화 ⇔ 최저임금 상승
 - 호봉제 ⇔ 정규직 전환
 - 소수 대기업 직장별 노조, rent-sharing ⇔ 사회적 타협
 - 입법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증세와 근로장려세제와 사회보험 강화로 중심 이동해야
-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필요
 - 수량목표에 크게 집착하지 말아야
 - 정부, 공기업, 사회적기업, 민간기업의 효율적 분업체제 구축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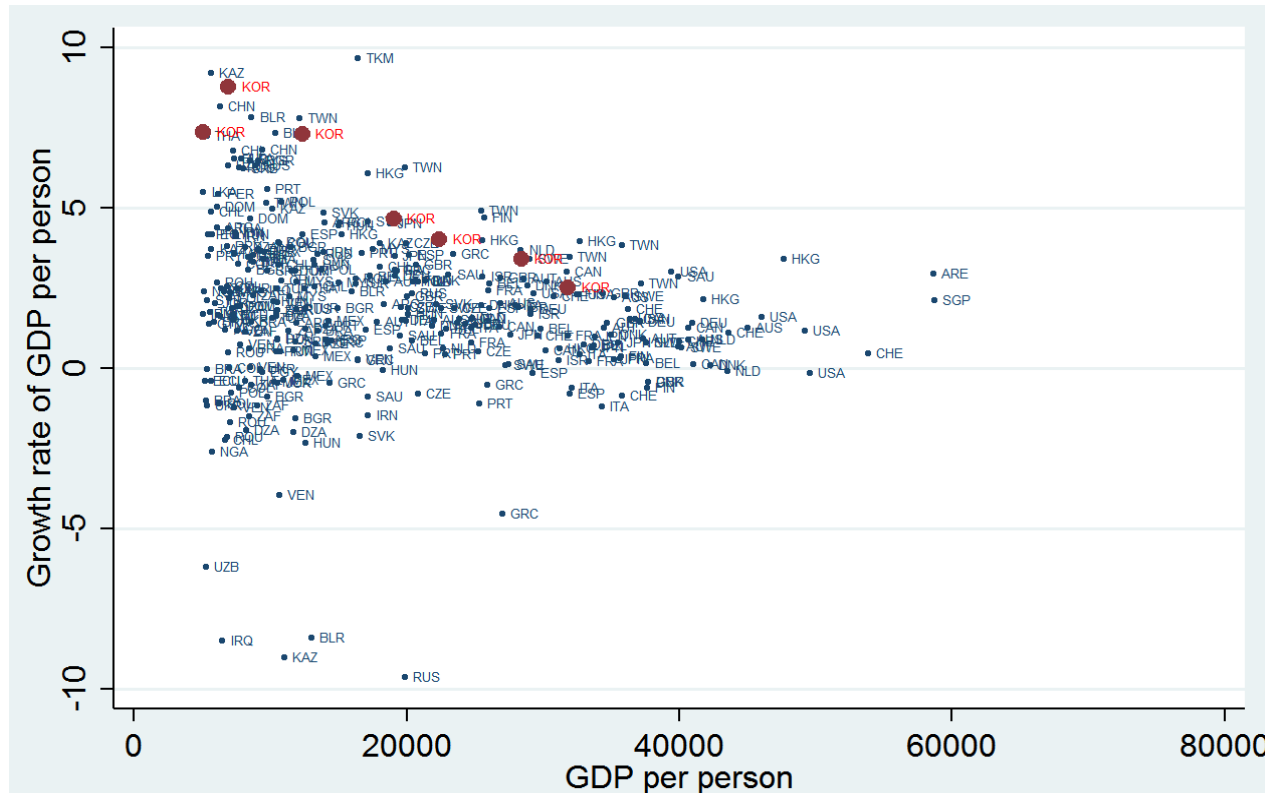
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필요성



비시장서비스(교육, 보건, 행정)의 고용 비중 (EU KLEMS)

한국 성장률 침체 왜?

일인당 GDP(PPP)의 수준과 5년 평균 증가율 (1980-2014, PWT 9.0)



일인당GDP로 보았을 때 한국경제 2010년대 중반까지 유사한 경제발전 단계에 있는 대부분의 다른 나라보다 빠르게 성장

한국 성장률 침체 왜?

노동생산성(PPP) 수준과 5년 평균 증가율 (1980-2014, PWT 9.0)



노동생산성 증가율은 거의 최고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0-2014 기간
중위 이하로 급락

한국 성장을 침체 왜?

- 보수 – 공급 요인, 진보- 수요 요인
- 2000년 이후 많은 선진국에서 노동소득분배 비율 악화
- 대부분의 소득불평등 지수 2011 이후 안정적
- 2011-2015 취업률 급증했으나 고령 취업자 비율 급증
(인력노령화의 결과?)
- 2000년대 수출 대기업들이 수출 급증으로 생산설비 확충했으나 세계금융위기 이후 수출이 침체하자 이들 기업의 생산성이 감소한 것으로 측정되었을 가능성(labor hoarding, capacity utilization)
- 총요소생산성 감소를 기계적으로 공급 요인의 결과로 해석하는데 문제 있음.